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이 들어설 광주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전경. 광주시와 현대차그룹이 각각 1대 주주(시비 483억원 투자)·2대 주주(437억원)로 참여해 설립한 (주)광주글로벌모터스는 오는 2021년 4월까지 부지면적 60만4300여㎡, 건물 연면적 10만 9200여㎡ 규모로 연간 10만대 생산 라인을 갖춘 완성차공장을 짓는다. 시험생산을 거쳐 2021년 하반기부터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은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양산할 계획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형 일자리’ 시동... ‘한전공대’ 세계적 대학 기대감

민선 7기 광주·전남은 전국 어느 지자체도 하지 못했던 굵직한 결과물들을 만들어 냈다. 광주는 세계 그 유례가 없는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을 지난 12월 26일 착공하며 본 궤도에 올려놨다. 막판 노동계의 이탈 조짐이 아쉽지만, 글로벌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임금을 낮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을 적용한 선구적인 시도다. 국내에 자동차 공장이 들어선 것은 23년만이다. 이를 모델로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광산업 이후 새로운 미래 산업을 찾지 못했던 광주에 인공지능(AI)을 선사한 것 역시 의미가 크다.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자 전산업 연관성이 높은 AI 산업에 향후 광주 미래를 더 빛나게 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광주시는 올 상반기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구개발 사업인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으로 신청해 국가사업으로 확정했다. 이후 AI 산업 성공을 위해 예산 확보 및 인프라 집적화에 집중할 결과 ▲내년 AI 국비예산 626억원 확보 ▲AI 중심도시 광주만들기 추진위 출범 ▲미국 실리콘밸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광주과학기술원 AI 석박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설립이라는 구체적 성과를 가져왔다. 연말에는 AI 집적단지가 들어설 첨단3지구를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해제하는 난제를 풀면서 광주가 AI 대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갈등·분열·행정력 낭비의 전형인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착공한 점도 높이 살 수 있다.

전남은 우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그 근간을 마련했다는 점, 과거 노력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난제를 해결한 점 등을 높이 살 수 있다. 철강·화학·조선 등 중공업 공장 위주의 산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던 전남이 세계 수준의 연구개발 중심대학인 한전공대를 품은 것은 최근 30년 이래 가장 큰 뉴스라고 할 수 있다. 한전공대를 핵심으로 에너지 신산업의 기치를 내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전남의 새천년 미래를 아우르는 ‘정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는 전남 자산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다.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역시 민선 7기가 내건 중요한 과제다. 인구 감소, 고령 인구 증가 등 쇠락하고 있는 전남이 세계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 발전에 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무엇보다 전남이 반긴

광주시
AI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국가사업 확정 성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행정 신뢰회복 급속무

전남도
블루이코노미·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박차
흑산 공항·4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 속도내야

것은 청렴도의 향상이다. 사실 청렴도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 전남도가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민선 7기 김영록 호가 해냈다. 규제자유특구도 영광·목포·신안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까지 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갖춘 지역은 전국에서 전남이 유일하다. 사상 처음으로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7조1896억원을 확보한 점은 부진한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투자를 늘릴 수 있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인정받을만하다.

호남 차별의 상징으로 여겨질 정도로 지지부진했던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도 영·호남 관광 활성화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했다는 평가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줄곧 단체장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한 것도 이 같은 성과와 연관이 크다.

2020년, 광주·전남이 새 도약을 위해서는 민선 7기에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어 단체자치, 즉 재정·관한 등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의 몫을 제대로 챙기고, 주민의 뜻을 반영하며 선도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무엇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빛어낸 행정의 신

뢰 회복이 급선무다. 지자체 행정에 대한 외부 감사 시스템 도입이라는 명분 속에 민선 6기에서 도입한 감사위원회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모를 통해 선임된 감사위원장이 사실상의 전권을 행사하며, 성과 위주로 감사를 진행, 종합적인 검토가 필수적인 지방행정의 근간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문제는 감사위원회의 무책임한 개입에서 시작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선 7기 출범 2년째를 맞이하지만 행정 전반에 여전히 관료 중심적인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도 쉽게 지나치기 어렵다. 신속한 판단이 필요 없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전문가,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지역 내부 역량을 모으고, 단체장이 이를 수렴하는 방향을 설정해 지역과 지자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남은 지지부진한 흑산공항 건설, 4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이 필요하다. 전남의 섬, 해안 등 관광자원을 전국민, 세계인이 찾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전공대와 더불어 첨단연구기반시설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빛가람혁신도시에 들어설 경우 그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00년대 들어 전남의 절대절명의 과제가 돼 버린 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를 타개할 장단기 대책, 사라져가는 전남 고유의 전통 문화 및 경관의 보존과 복원 등도 챙겨봐야 할 사안이다.

해방 이후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등에 밀려 쇠락과 소외의 상징이 된 광주·전남이 민선 7기에서야 비로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2020년에는 궤도에 오른 광주·전남호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첫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단체장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역량을 한 데 모으고,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로 재편될 지역 정치권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권한 등을 얻어내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민은 현재의 개개 이익에만 집중하는 ‘이기’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 미래 세대, 지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하며 지자체 행정에 참여하는 ‘21세기 깨어있는 광주·전남인’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전공대가 들어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전경. 한전공대 최종 입지가 나주로 확정되면서 전남을 ‘에너지 신산업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전공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 중심 대학을 목표로 오는 2022년 개교 예정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